

Welfare
Issue
Today

2014
9.18
vol.18

복지이슈 Today

편집인의 글	3	복지체감도 : 사회복지적 상상력을 발휘하자 / 김지영
이슈	4	[이슈 ①] 신청하는 복지를 넘어서,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 남기철
	5	[이슈 ②] 주민자치, 복지를 만나다 : 성복구 '열린토론회' / 이수영
	6	[이슈 ③] 복지상담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사례 / 유준용
	7	[이슈 ④] 사회복지관 이용자만족도 제고 사례와 정책적 지원 방향 / 이영경
	8	[이슈 ⑤] 베이비부머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손유미
	9	[이슈 ⑥]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지원서비스 / 전지혜
	10	[이슈 ⑦]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안전망을 만드는 공공보건요서비스 / 홍주희
해외동향	11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자폐스펙트럼장애인 지원프로그램 / 전채경
	12	[영국] 지역시민의 삶에 깊숙이 다가가는 시민 자긍심 기금 / 전미양
	13	[독일] 장애청소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시스템 : '학교가 직장과 만나다' / 박은정
	14	[프랑스]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강화 / 이은주
	15	[일본] 자존감 회복을 통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 구시로시 사례 / 김원경
	16	[일본] 가시와시의 제2의 인생지원사업 : 취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박지선
	17	[호주] 센터링크의 서비스 개혁 : '급여 지급'에서 '관계 형성'으로 / 김지영
이슈와 통계	18	지역에 따른 삶의 질 : OECD 지역별 웰빙 지수 / 이재연

복지이슈 Today

편집위원회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장, 장애인직업재활학 박사, 편집위원장)
김승연(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김지영(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위원, 교육학 박사)
안철홍(서울시복지재단 전략경영본부 기획조정팀 차장)
윤희숙(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정책연구팀장, 경영학 박사)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정책학 박사)

집필진

김원경(일본복지대학 지역케어연구추진센터 연구원, 사회복지학 박사)
김지영(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위원, 교육학 박사)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학 박사)
박은정(독일 보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지선(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초빙강사, 보건복지학 박사)
손유미(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훈련노동연계연구실장, 교육학 박사)
유준용(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과장)
이수영(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정책연구팀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이영경(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은주(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전임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이재연(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팀 위촉연구위원)
전미양(영국 요크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전지혜(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장애학 박사)
전채경(미국 미주리대학교 공공정책학 박사과정)
홍주희(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노인정책팀 연구위원, 예방의학 박사)

복지체감도 : 사회복지적 상상력을 발휘하자

복지예산은 나날이 늘어나는데 복지체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들이 들린다.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소위 복지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OECD 회원국 중 사회보장 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그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니,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뼈아픈 지적이다. 예산의 증가가 체감도 향상의 필요조건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예산이 증가된다고 해서 체감도가 자연히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번호 「복지이슈Today」에서는 다양한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이슈1에서는 시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찾아감으로써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복지 플래너’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슈2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복지정책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성북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슈3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복지상담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사례 속에서 찾아보았다. 이슈4와 5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서비스와 베이비부머 일자리 대책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 전략을, 이슈6과 7에서는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해외동향에서는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각국의 창의적인 시도들을 살펴보았다. 여기 소개된 프로그램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에서 주목할 점은 해당 제도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에 대한 존중을 문제해결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다. 특히 마지막에 실린 센터링크의 사례는 급여 지급으로 상징되는 ‘메마르고 기계적인’ 사회보장 업무조차도 인간적인 관계가 뒷받침이 된다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따뜻한 서비스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슈와 통계에서는 최근 발표된 OECD 지역별 웰빙 지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7개 지역의 시민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단순한 지표로 통해 산출되기는 하였으나 우리 시민들의 삶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삶은 점점 복잡해지고 복지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찰스 라이트 밀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복지적 ‘상상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개인의 고통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이슈를 찾아내는 능력이라면, 사회복지적 상상력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전문직과 정책입안자, 공무원, 연구자들이 늘어날 때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신청하는 복지를 넘어서,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민선5기 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복지공약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이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이었다면, 민선6기에서는 '복지플래너'라 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의 당선 이후 구체적 설계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 공약의 핵심 내용은 ①아동의 출생, 노년기 진입 시점에 있는 모든 가구에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의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②복지보건의서비스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③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포함한 정보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고도화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체제인 동단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을 가칭 '복지플래너'라고 부르며, 이를 위해 임기 중에 2,000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신규로 확충하고 방문간호사도 추가로 증원할 계획이다. 동 단위 행정은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육성되고 있는 민간의 자체적 역량을 결합하여 '마을복지의 거점'으로 만들려고 한다.

중앙정부도 유사한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제1차 사회보장계획에서는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을 토대로 공무원 및 민간인력을 확충하여 읍면동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비교하자면 서울시의 복지플래너 계획이 중앙정부의 것보다 규모가 더 크고 세부내용면에서도 더 획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마을과 협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어찌되었건, 중앙정부나 서울시 모두 현재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간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수요자인 시민이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신청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또 턱없이 적은 복지인력으로 인해 수많은 복지업무가 현장에서 '갈때기'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자연히 사례관리가 부실하고 찾아오는 시민을 대상으로 소극적인 복지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보의 장벽도 높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한 사회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계획은 첫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둘째, 비약적인 인력확충을 동반한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셋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 행정혁신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과거의 이러저러한 복지전달체계 개편노력과 달리 단위 복지인력을 두 배에 이르도록 하는 대규모 자원투입을 공언하고 있고, 일선 공공복지 행정에도 민간과의 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과감히 도입하는 방식이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찾아오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장밋빛 환상만을 가질 수는 없다.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한 번도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에 도달해본 적이 없다. 경직된 행정관행 속에서 대대적인 체계 개편과 민관 거버넌스를 잘 수용할 수 있을지는 숙제이다. 공공만이 아니라 지역의 민간부문이 건강한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찾아가 체감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역사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서울시의 과감한 구상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_ 남기철

▶ 관련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2014)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2014) 2014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메니페스토 답변서 <http://www.manifesto.or.kr/>

주민자치, 복지를 만나다 : 성북구 ‘열린토론회’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하면 주민과의 접촉점이 많은 생활,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무¹⁾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

최근 이념이 아닌 생활정치가 강조되면서, 지방자치의 무게중심은 단체자치를 넘어 주민자치로 이동하고 있다²⁾. 많은 자치단체들이 청책워크숍,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성북구의 사례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성북구는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열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열린토론회는 ‘교육·아동정책’, ‘인권’, ‘복지공동체’, ‘여성’, ‘생활체육’, ‘건강’, ‘안전’, ‘마을리더 통장’의 8대 분야별로 개최되고 있다. 열린토론회는 문자 그대로 모든 지역주민에게 열려있으나, 주로 분야별 관련 기관과 단체, 해당분야에 관심이 있는 주민 및 전문가, 그리고 성북구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열린토론회를 기획·준비·운영·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풀뿌리 단체 및 기관, 주민들은 유사한 지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기관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유하였고, 무엇을 특화시킬 것인지를 정리할 수 있었다. 즉, 열린토론회라는 공론장을 통해 정보의 소통과 연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열린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출·심의되고 있다. 열린토론회의 경험은 서울시로부터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일조하여 성북구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래 처음으로 누적 사업액 100억 원을 돌파한 최초의 자치구가 되었다. 사업의 타당성, 지역사회에서의 우선적 필요성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투표로 결정되는 ‘201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서 성북구는 장애인이 오를 수 있는 북한산 자락길 만들기, 한부모 등을 위한 아이맘센터 건립 등의 예산으로 34억여 원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수치적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 과정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참여자로 구성된 공론장은 특정한 기관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 많은 노력을 통해 자리 잡은 공론장이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하고³⁾, 모든 목소리가 동일한 무게로 존중되어야 하며, 모든 의견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글 _ 이수영

▶ 관련자료

아시아경제(2014.7.31) 성북구민, 서울시주민참여예산 100억 끌어온 비법?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3107023720379>

- 1)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④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임.
- 2)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하위개념으로 단체자치는 일정 지역을 기초로 독립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일정 지역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그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민자치는 지역의 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함(행정학전자사전 참고).
- 3) 성북구 역시 열린토론회 운영결과에 대한 개선점으로 참여인원 증폭의 최소화화 다양한 참석자 참여 유도를 꼽고 있음(성북구 내부자료 참고).

복지상담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사례

2013년 7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¹⁾가 개소한 이래 2014년 상반기까지 5,200여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기록했다. 그동안 서울시청 홈페이지²⁾에 매월 1회 이상의 칭찬사례가 올라오는 등 상담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 이러한 높은 만족도의 요인은 무엇일까? 상담사들과의 사례회의를 통해 파악한 몇 가지 주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자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자세이다. 센터에는 과다채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이 찾아온다. 상담사는 그러한 어려움을 공유하지만 절대 개인의 부덕함을 탓하지 않는다. 칭찬사례에 올라오는 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내담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끝까지 귀담아 듣고, 금융약자가 된 원인을 추궁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낀다는 것이다. 내담자의 그늘진 얼굴을 보고 나서 상담사가 던지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첫마디는 모든 벽을 허물고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

둘째, 철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다. 내담자의 경제여건과 가정환경,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고리의 대출이자를 덜기 위한 전환대출, 신혼부부의 미래자산을 위한 재무설계, 과다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채무조정, 은퇴 후 경제적 삶을 이어가기 위한 상담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상담사의 개인역량과 마인드가 중요한데, 주1-2회의 사례회의를 거쳐 상담사의 관점과 역량

을 한데 모아가는 작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자녀에게 채무를 물려주고 싶지 않은 어르신이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민자 등에게는 대필이나 동행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돕고 서류발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기관에 동행하기도 한다.

넷째, 사후관리이다. 금융복지상담은 단순한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로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 사례로 가는 경우가 많다. 과다채무자의 경우 채무조정을 마친 후에도 주택, 일자리, 생계, 자녀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다시 대출의 골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사는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수행한다.

금융복지상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절차나 대상, 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등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한 금융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용과 주택은 민선6기 시정의 주요 과제이자 채무조정을 거친 내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금융복지상담은 돈에서 문제를 찾고 사람으로부터는 희망을 찾는 일이다. 금융과 복지의 윈스톱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시민들의 호응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글 _ 유준웅

▶ 관련자료

- 서울시복지재단(201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사례집.
서울시복지재단(201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복지상담 매뉴얼.

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는 유준웅(2014.4) “복지와 금융의 만남” 『복지이슈Today』vol.13 p.5 참조
2) 서울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시민의견-칭찬합시다’ <https://spp.seoul.go.kr/main/treeboard/praiseboard.jsp>
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내 상담사례 중 [우수사례] 참조 <http://stwc.welfare.seoul.kr/dataCaseList.do>

사회복지관 이용자만족도 제고 사례와 정책적 지원 방향

서울시에는 98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층밀집지역, 재개발지역, 중산층혼합거주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기능적으로 노인·장애인 또는 아동·청소년·여성·가족 등의 다양한 대상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관들이 사용하는 주요 전략은 “이용자육구와 지역특성이 잘 반영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을 담보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며, “이용자 중심의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 또한 중요한 전략이다.

이용자 중심 서비스의 첫걸음은 이용자들의 상황에 맞춘 이용시간 및 장소의 선정이다.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들은 생업, 학업, 간병 등의 이유로 기관운영 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지리적, 심리적 이유로 학교, 종교기관,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다. 동일한 프로그램도 이용자들의 상황에 따라 야간이나 주말에 시행하거나, 교통이 편한 익숙한 장소에서 실시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측면은 프로그램의 기획, 홍보, 진행, 평가, 모니터링의 전 과정에 이용자가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다¹⁾. 잘 준비된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때와 이용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의 주체로서 참여할 때 결과물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관운영에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프로그램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용자 만족도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²⁾

사회복지관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설립되어 위탁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대다수이며, 실제로도 많은 사업

들이 정부위탁사무이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있을 때,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관만큼 지역 곳곳에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시설도 드물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역조사에서 인지도, 이용경험, 만족도, 향후 이용의지 등에서 민간사회복지시설 중 선두에 서 있다. 사회복지관이 정부와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통해 복지정책·행정 효과를 증폭시키고, 그 이상의 성과물을 창출하여 주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려면, 동일한 사업의 획일적 수행보다는 기관 고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하여 유연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복지기관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상황논리에 안주한 최저기준이 아니라 합리적인 ‘최적기준에 맞추어져야 한다. 비합리적 기준의 운영비 지원, 비현실적인 식사단가,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일자리사업, 최저임금 수준의 전담인력 임금 등은 양질의 서비스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 이용자는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그만큼 만족도도 증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OECD회원국인 한국 국민들의 욕구는 이미 최적 이상의 수준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시민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기대욕구는 높인데 최저기준을 고수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만 하기 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체감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글 _ 이영경

1)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 사례(이화체널홍보기자단, 고객모니터링단, 한부모가족프로그램, 안산골공동체프로그램,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등)는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www.ewhelfare.or.kr/>)의 ‘좋은진구이화-나눔소식’에서 볼 수 있다.

2)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이용자만족도가 2009년에서 2012년에 걸쳐 과점품질(88.3→94.0) 환경품질(81.7→95.0) 성과품질(85.3→95.3) 기관성숙(86.6→96.2) 종합만족도(82.4→94.7)로 향상되었다.

베이비부머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7백만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대책들이 각 중앙부처별로 집행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인생이모작 센터'를 설치하여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시는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를 위한 대책은 이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대책'은 아니다. 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세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다.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나는데 노동생활의 기간은 점점 짧아지는 역설적인 상황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비부머들의 고민 1순위는 일자리로 나타난다. 베이비부머를 대다수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생계형 노동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후 불안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대안이 일자리 대책이다. 이는 베이비부머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노년층 모두에게 생계는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소중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의 베이비부머세대 대책도 일자리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세대가 처한 여건과 요구에 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정책의 체감도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정책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야 할 수 있는 번거로움도 한 몫을 한다. 베이비부머대를 위

한 종합정보포털서비스¹⁾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 또한 모르는 사람이 많다.

둘째,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다. 일단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적기도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도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경우, 최초의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지원센터로서의 의미와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사회참여가 중심이 되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결과에 미루어 볼 때 이용대상층의 쓸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부머대를 위한 복지서비스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자리 복지서비스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지역단위로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지자체에 '베이비부머지원과'를 설치하여 각 정부부처의 재원과 지자체의 인프라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둘째, 서비스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의 양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발굴과 함께 생계형 일자리 아이템의 발굴을 고민해야한다. 셋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베이비부머들에게 일자리는 '생계'와 '존재'를 동시에 내포하는 소중한 삶의 조건이다.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양을 절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글 _ 손유미

▶ 관련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1)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정책개발 연구 <http://www.nrcs.re.kr>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2014)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1주년 기념행사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정보광장-자료실-센터자료) <http://www.seoulseunior.or.kr/>

1)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보건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 <http://www.activebb.kr> 및 50+서울(서울시) <http://senior.seoul.go.kr> 등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지원서비스

근로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중증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돕는 서비스이다. 활동지원과의 차이가 있다면 장애인의 근로에 초점을 맞추고 직장 내 업무 수행을 돕는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 기관 등에 취업한 장애인이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근로지원은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출퇴근 보조, 출장시 이동지원, 의사소통 지원, 근무시간 내 식사보조 등 직접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전 영역을 포괄한다.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담당자의 방문 면접과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1, 2급 중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는 활동지원제도와 달리 3급 장애인의 경우에도 근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노동을 통한 복지와 자립생활은 장애인복지에서 핵심적인 영역이다. 근로지원은 고용 장벽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뚫고 입사하였으나 업무진행 상의 어려움으로 조직 내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노동을 통한 복지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서, 고용주와 장애인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도 하다.

근로지원인 이용경험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용경험자의 8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업무처리 능력의 향상(79.8%), 서비스 이용 전보다 많은 일처리(83.1%), 근무시간에 느끼는 피로감 감소(64%), 업무처리에 대한 자신감 생성(73%), 직장동료와의 관계

개선(65.2%), 직장 상사와의 관계 개선(68.5%), 근무조건 향상(41.5%) 등의 결과를 보여, 전반적으로 업무 및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 시행 기간에 비하여 장애인 고용률 증대에 미친 영향 등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찾기는 어려운데, 이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고용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기에, 중증장애인의 고용 실적이 낮은 현실에서 성과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근로지원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및 업무 효율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고 고용주가 허기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는 점이다.

근로지원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고용주와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장애인 근로자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으며, 고용주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용된 장애인들에게 근로지원인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알고 있어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하는 장애인들도 있는데, 이는 자신만의 업무 속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 및 방식의 변화를 경험한다면,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장 내 통합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셋째, 예산 확보의 문제이다. 근로지원 사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 증진, 장애인의 사회통합 모두를 촉진시킬 수 있다. 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가 사회변화를 위한 가치투자의 차원에서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_ 전지혜

▶ 관련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2007)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과 효과적 운영방안.

이상진(2010)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석사학위논문.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안전망을 만드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서울시는 2013년 7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서울시립병원의 공공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목표는 서울시내 13개 시립병원을 남녀노소 시민 모두에게 문턱 없는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러한 운영 활성화를 바탕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되면 이를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어르신, 모자, 어린이, 장애인 등 공공의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병원별로 특화된 센터를 두어 중점적으로 챙기고, 정신보건, 대량 환자 발생, 감염병 대응과 같은 특수분야 공공의료도 더욱 체계화하는 등 중점 공공의료 분야 서비스에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어르신 의료는 북부·서남·서북병원, 모자보건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장애아동 의료는 어린이병원 등 기존에 특화되어 있던 관련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거나 새롭게 신설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의 시민체감 공공의료계획 중 이용자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실행되고 있는 서남병원 백세건강센터의 노인포괄평가제도가 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만성질환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의사와 상담 후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옷 입기, 양치질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관한 것부터 물건사기, 금전관리 등 복잡한 과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신체기능 평가, 요실금 평가, 통증평가 등 영양·사회·의료에 포함된 포괄적인 검사이다. 노인우울증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와 고령화 사회의 대표 질환인 치매를 고려해 치매선별검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만성질환

으로 약제를 중복 복용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 복용중인 약물과 알레르기 반응도 확인한다. 서남병원의 백세건강센터는 의사, 전문코디네이터,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가 한 팀을 이뤄 병원에서만 아니라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센터에 등록이 되면 노인포괄평가 검사 후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 영양처방 및 교육, 고혈압·당뇨·골다공증 등 맞춤 백세건강교실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처방한 약을 먹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용지도를 충분히 받으며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로 관리를 받는다. 특히, 전문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해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사회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의 체감도를 고려한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반짝 서비스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에 정착되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시립병원 보조급 지급기준을 개발하고 성과 및 원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시립병원은 민간의료체계에서 소외된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의료보장기회를 위해 설립된 시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성의 논리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공공성을 인정하여 건강한 적자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불건강한 적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건강한 적자'는 적자 폭이 클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글_홍주희

▶ 관련자료

서울시 보도자료(2013.7.11) '서울시립병원, 시민이 주인 되는 병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
서남병원 백세건강센터 홈페이지 http://www.eussh.org/dept/clinic_01.asp?AC_F=3&AC_S=1&m_code=50

펜실베이니아주 자폐스펙트럼장애인 지원프로그램

최근 미국 내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 ASD)¹⁾ 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재조명받고 있다. 2014년 8월에는 미국 상원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연구, 교육, 지원 사업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펜실베이니아 주정부는 지난 2004년 자폐성장에서 비스국(Bureau of Autism Services)을 신설하여 성인 ASD 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인 '성인자폐성장애지원(Adult Autism Waiver)'과 '지역자폐성장애 프로그램(Community Autism Program)'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하고 시행해왔다. 펜실베이니아 주정부는 전미 최초로 자폐성장장애인을 위한 치료, 행동발달 전문가 상담, 취업지원, 가족상담 및 훈련, 지역사회 참여 지원, 일상생활 훈련, 기술 지원, 영양 상담, 위기관리, 가족을 위한 휴가 제공 등 다부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폐성장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창의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자폐성장에서비스국은 지난 2005년 관할구역 내 자폐스펙트럼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첫 인구조사(Pennsylvania Autism Census Project)를 실시한 이후 주기적으로 이를 갱신하고 있다.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주에 등록된 21세 이상 자폐성장장애인의 수는 8,395명이다.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자폐성장장애인들의 수가 181% 늘었고, 특히 자폐성장애를 앓는 성인의 수는 33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미등록환자를 포함한 실제 자폐스펙트럼장애인의 수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

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2020년에는 성인 자폐성장장애인의 수가 약 30,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의 자폐성장애인지원프로그램에 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인구조사에 이어 주정부가 실시한 '펜실베이니아 자폐성장애 필요조사 : 자폐성장애를 겪는 개인 및 가족대상 설문조사(Pennsylvania Autism Needs Assessment : A Survey of Individuals and Families Living with Autism)'에 따르면, 다부문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성은 훌륭하다고 평가 받았다.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대상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펜실베이니아 자폐환자 인구를 모두 지원하기엔 역부족이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자는 많은 반면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부족한 점이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소아 자폐스펙트럼장애인의 경우 자라면서 교육과 취업을 통한 자립 등 더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위한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장기적 치료의 부재는 위험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의 부재로 이어져 위기상황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점과 자폐성장애인들을 돌볼 책임이 고스란히 가족들의 어깨에 지워진다는 점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어 펜실베이니아주의 지원 프로그램이 자폐성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

글 _ 전체경

▶ 관련자료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자폐스펙트럼장애인 지원프로그램 관련 페이지

<http://www.dpw.state.pa.us/foradults/autismservices/adultautismwaiver/servicedescriptions/index.htm>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자폐성장애 필요조사 요약본(2011)

http://www.paautism.org/desktopmodules/asert-api/api/item/ItemDetailFileDownload/160/ASERT%20Autism%20Needs%20Assess_Statewide%20Summary.pdf

1) 자폐스펙트럼장애(자폐성장애)는 아스퍼거장애(Asperger's Disorder), 아동기 붕괴성 장애(Childhood Integrative Disorder), 레트장애(Rett's Disorder),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PDD-NOS)를 포괄하며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증상이 스펙트럼처럼 다양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지역시민의 삶에 깊숙이 다가가는 시민 자긍심 기금

2011년 제정되어 이듬해 2월부터 효력을 발생한 영국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은 각 지역자치단체 의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즉, 지방의회는 기존 법률을 어기지 않고,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일반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의회, 도의회 및 단일지방정부 등 각 지역의 주요 자치 단체에 모두 적용된다. 영국 전역 지방정부들은 지역주권법을 근거로 지역 내에서 새로이 시작되거나 지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2012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복지 영역을 포함하여 교육, 환경, 상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제3섹터나 비영리 및 비정부 기관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특히, 리치몬드런던자치구(The London Borough of Richmond)는 이 권한을 활용하여 개인 또는 지역단체가 직접 지역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 소액의 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자긍심 기금(Civic Pride Fund; CPF)을 운영 하고 있다. 리치몬드런던자치구 CPF의 특징은 우선순위가 높은 몇 가지 기본 계획을 제외하면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한 보조금 사용범위가 비교적 넓다는 데 있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지역의 인재를 활용하여 지역과 마을을 위하는 비영리사업이다. 연간 보조금 예산은 100,000-150,000파운드(1억 7천-2억 5천만원)선이며,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한 사업에 각각 최대 5,000파운드(약 840만원)까지 일회성으로 보조한다. 2011년 이후 약 40개의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환경사업, 빈곤이동, 예술사업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CPF를 활용한 사업들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2011/12년에 1,280파운드(약 220만원)의 보조금을 취득한 템스 탐사 협회(Thames Explorer Trust)는 관광경험이 없는 18세 미만의 빈곤 아동 및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런던 템스강과 그 주변을 걷거나 보트를 이용하여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리치몬드 가구 계획(Richmond Furniture Scheme)은 4,900파운드(약 820만원)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장기실직자와 청소년을 훈련시켜 낡고 버려져 폐기될 가구들에 새 생명을 부여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이 가구들은 지역의 빈곤가정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비영리 단체인 리치몬드 SPADE는 5,000파운드(약 840만원)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의 정원을 책임지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SPADE는 보조금을 정원관리용 장비구입과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했으며, 정원관리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의 정원 정리 및 가지치기 등을 도와 이들 가정에게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

CPF는 2011년부터 이루어진 지속적 공모와 '공공성을 띄는 지역사업'이라는 사업의 다양성을 토대로 시민과 단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만, 소액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을 취득한 후 활용하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 사업 수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대중 인지도가 높지 않고 지방의회의 예산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어, 지역주민이 이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글 _ 전미양

▶ 관련자료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3), The General Power of Competence http://www.local.gov.uk/c/document_library/get_file?uuid=83fe251c-d96e-44e0-ab41-224bb0cddcf0e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3), Empowering councils to make a difference http://www.local.gov.uk/c/document_library/get_file?uuid=f5a54dc8-6fb5-4790-9c40-b4c4bbee98e2&groupId=10180
- Rachel Bishop (2012,1,27), Richmond gardening project gets £5k funding, Richmond & Twickenham Times http://www.richmondandtwickenhamtimes.co.uk/news/richmondnews/9496272.Gardening_project_gets_5k_funding/

장애청소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시스템 : ‘학교가 직장과 만나다’

STAR(Schule trifft Arbeitswelt, 학교가 직장과 만나다)는 장애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제적인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NRW) 주의 노동·통합·사회부와 지역협회(Landschaftsverband)¹⁾의 계획 하에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독일 연방노동청의 NRW 지역담당국과 NRW의 학교·직업교육부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해당 재정은 유럽 사회기금의 지원금과 연방 조정금(Ausgleichsabgabe)으로부터 동일한 분할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협회는 사업담당자로서 각 지역에서 STAR를 시행하는 사회통합전문(Integrationsfachdienste)서비스를 배정하는 조정사무소(Koordinierungsstelle)를 운영한다.

STAR의 목표집단은 정신 및 신체발달, 청각, 시각, 언어장애 등으로 인해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다. 주정부는 “연계 없는 졸업 없다”는 구호 아래 학교-직업 전환을 위한 직업사전교육의 일반 모듈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일한 연장선에서 장애청소년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STAR를 실시하고 있다.

STAR의 주요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장애청소년들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직업 전환 과정에서 직업사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실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실무적인 직업교육과 실습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늘리고 장애인작업장 이외에 적합한 직업준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STAR는 개혁적 접근방식으로 개별적 지원과 구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회통합 전문인력을 통해 장애학생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학교-직업 전환과정과 관

련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확대한다.

STAR는 기본적으로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잠재력분석, 직업탐색, 실무실습, 부모 대상 업무가 기본 모듈이고, 선택 모듈로 직업탐색세미나, 기업탐색, 업무 상 주요 사회성 집중훈련, 운동성훈련, 청각장애청소년을 위한 직장관련 의사소통훈련, 기업 장기실습 또는 직업생활로의 전환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첫 모듈인 잠재력분석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학교 정규과정 졸업 3년 전에 실시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학생의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직원, 부모, 사회통합전문인력이 함께 직업진로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노동청의 재활 상담과 학생과의 논의를 통해 직업탐색과정의 다음 단계를 계획한다. 사회통합전문인력이 교육과정에 대한 개별지도를 담당하고, 일자리아선, 직업교육알선, 잠재적 고용주와의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상담과 지원, 청소년의 초기 업무 숙달 지도 등이 이루어진다.

STAR 시행 첫 해에는 잠재력분석 위주로 실시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직업탐색과 기업에서의 실습 시행수가 증가하고 있다. 갈수록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약 20%가 일반 노동시장으로 연계되었다.

STAR가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 및 지역 유관기관들과 기업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STAR는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의 실질적인 효과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_ 박은정

▶ 관련자료

Landkreis tag Nordrhein Westfalen(2014), 아일딘스트(Eildienst,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역연합의회 월간지), LWL&LVR(2013), 직업 세계로의 초기지원(Starthilfe in das Berufsleben),

1) LWL(Landschaftsverband Westfalen-Lippe)과 LVR(Landschaftsverband Rheinland)를 가리킴. 지역협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권민정(2013,7) 『복지이슈 Today』vol.4 p.13 참조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강화

프랑스의 자살인구는 인구 10만명당 14.7명의 비율로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유럽국가의 평균은 10만명당 10.2명이다).¹⁾ 다른 유럽국가들처럼 지난 10년 동안 자살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5-19세 청소년의 자살이 줄어드는 반면 8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은 늘어나고 있고 50-54세의 자살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살성공률이 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경우 약물중독이 주원인으로 나타나 프랑스 정부는 다양한 자살원인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정부차원의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2011년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에 자살 특별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는 1990년에 이미 발표한 정책을 보완·강화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자살문제를 공중보건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공공정책의 하나로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특별 정책은 2011-2014년 4년간의 프로그램으로 자살예방, 자살시도 경험자들의 관리, 자살 미수 이후의 재발예방정책, 자살시도 경험자의 가족 및 친지들과의 관계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환경은 물론 개인환경도 고려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에 주목하고 있는데, 노인층, 동성애자, 약물중독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과 가족들이 여기 속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2013년 9월에 국립자살예방협회(L'observatoire national du suicide:ONS)를 설치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된 이 기구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정부부처인 법무부, 노동부, 교육부, 농수산부, 사회통합부의 관련정책가들과 건강관련 전문가, 학계전문가들의 참가로 자살문제를 다

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책 역시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1년에 2번 총회의를 갖고 자살현황과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더불어 다양한 측면으로 자살문제의 접근을 세분화하고 소그룹으로 나누어 전문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매해 주제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크게 6개 측면에서 49개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 6가지 주요 대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자살예방과 자살시도자들의 보호 관리, ②심각한 자살시도자들의 보호와 그들의 가족 및 친지들을 위한 보호대책 개선, ③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④정신건강업무 관련자들의 교육, ⑤자살방지와 예방에 대한 연구 지원, ⑥지역규모의 프로그램 개발.

아직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 최종 결과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2012년 자살예방과 치료 등에 들어간 재정은 50억 유로(1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대책과 더불어 각 지방정부에서도 별도로 정책을 세워 병행하고 있다. 한 예로, 르와르(Loire) 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 자살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자살위험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 지방에서는 지역보건청(l'Agence Régionale de Santé:ARS)과 르와르 지방 사회농업 상호기관협회(l'Association Régionale des Organismes de Mutualité Sociale Agricole des Pays de la Loire)와 협력관계를 맺고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자살예방 정책의 특징은 전담기구 하나만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가능성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물론 시민단체와 협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글 _ 이은주

1) 201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인구 수는 프랑스 14.7명(16.8명), 독일 9.9명(11.7명), 이태리 5.4명(6.1명)임(괄호안의 명 수는 2000년의 평균 인구수).

자존감 회복을 통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 구시로시 사례

일본의 각 지자체는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생활보호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자립 촉진과도 관련이 있다. 정부에서도 생활보호제도 개정 당시, 각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홋카이도에 위치한 구시로시(釧路市)의 프로그램이다.

구시로시 자립지원프로그램은 편모가정 자립지원모델사업의 하나로 2004년에 시작되었고, 모델사업 종료 후 2006년부터 '구시로시 생활보호 자립지원프로그램'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구시로시의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존감 회복을 위하여 복지시설 및 병원, NPO 등의 협력을 받아 다양한 기관에서 유상·무상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발굴 되거나 재취업의 길이 마련되면서 각 수급자에 적합한 자립생활을 돕는 구시로시만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2013년에는 18년만에 인구 천명당 수급자수를 나타내는 '생활보호율'이 0.5%가 줄어 54.6%가 되었다¹⁾. 일본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자가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A. 고용지원 프로그램, B. 취업체험적 자원봉사프로그램, C. 취업체험 프로그램, D. 일상생활 의욕향상 지원 프로그램, E. 기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특히,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구시로시의 특

색 있는 프로그램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공원 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한 수급자들은 "땀을 흘리며 일하여 보람을 느꼈다", "생활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일 열심히 자내고 있다" 며, 자원봉사 활동으로 자존감을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 동물원 및 공원관리 자원봉사로 활동한 수급자 중에는 주2회 자원봉사활동이 취업으로 연결된 사례도 있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한 수급자는 "집에서만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기분전환이 되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힘들었지만 환자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즐거워졌다. 환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되어 정말 기뻐다"고 말했다. 참가 수급자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협력기관들 역시 이들의 자원봉사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참가자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여 안심하고 작업을 맡길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전속 코디네이터로 "자립생활지원원(계약직)" 2명을 배치하여 수급자와 사업소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자립생활지원원은 수급자가 일하고자 하는 기관에 연락하고, 업무 조정, 참가 상황 파악, 사례관리자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단기적인 직업 소개 및 연결이 아닌 자존감 회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먼저 추진하는 등,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자립을 원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다려주는 이러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 _ 김원경

▶ 관련자료

전국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 현황에 대하여,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보호과(全国の自立支援プログラムの取り組み状況について, 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保護課) <http://www.mhlw.go.jp/bunya/shakaihosho/seminar/dl/05-02.pdf>
 생활보호정보사이트(生活保護情報サイト) <http://seikatsuhogo.jp/news/iritsu-20140501>

1) 2013년도의 수급자수는 182명 감소한 9,853명(6,637가구)으로 이 중 고령자 가구가 전체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 구시로시 전체 인구는 약 18만명이다.

가시와시의 제2의 인생지원사업 : 취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자바현 가시와시(柏市)에 위치한 도요시키다이(豊四季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시와시), 산업체(도시재생기구), 대학(도쿄대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의 삼자 협력으로 건강장수사회 실현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한창이다. 여기에서는 노인취업지원사업인 '사는 보람 취업' 사업의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은퇴노인의 제2의 인생문제, 지역주민의 건강, 은둔형노인, 노인자원의 측면에서 지역사회 과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수행 첫 단계인 지역주민 면담조사를 통해 많은 응답자가 취업을 원하고(특히 고령 남성), 주5일 전일제 근무가 아닌 탄력적 근무를 희망한다는 욕구가 파악되었다. 응답자들은 일을 통해 자신만의 역할을 찾을 수 있고, 연금 외에 수입이 확보되어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자신감 향상으로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했다. 이를 반영하여 사업팀에서는 은퇴노인이 활동 가능한 5개 분야(농업, 먹거리, 양육지원, 생활지원, 복지)에서 9개 사업을 마련하였다. 또한 고령자가 활동하기 용이한 업무 분담을 핵심으로 하였다. 이후 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LLP(유한책임조합: 가시와시 농가 8명으로 결성), 학교법인, 주식회사,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선정되었다. 다음 단계로 취업희망노인 모집 및 사업자와의 매칭을 수행하였다. 처음에는 기존의 활동단체를 통해 모집을 유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미 활약하고 있는 노인보다는 취업처를 찾고 있는 노인을 발굴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세미나를 개최, 취업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세미나에는 2011년 11월부터 7회에 걸쳐 557명이 참가하였고, 이들 중 취업희망자를 모집하

여 연결한 결과, 2013년 6월 현재 174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세미나 수료주민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위해 '정기공부모임'을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약 200명이 참가 중이다.

9개 사업장에 취업한 노인들의 활동내용을 보면, '도시형 농업사업'의 경우, LLP소속 농가에서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사업팀이 확보한 휴경지 2곳에서 무와 양배추를 생산하고 있다. 농업 희망자 중 기술이 부족한 노인들이 적지 않아 2013년부터는 LLP가 운영하는 농업학원을 세워 1년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미니 채소농장사업'에서는 (주)다이와 하우스 공업에서 식물재배유닛을 기증받아 현재 5명의 노인이 채소재배를 하고 있다. '옥상농원', '지역식당', '이동판매·배식서비스' 사업은 지역의 이미지 및 기능에 대한 내부검토와 함께 사업담당자를 공모 중이다. '양육지원사업'과 '복지서비스사업'에서는 보육과 개호전문가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학동보육사업'에서는 '차세대형 진학학원 넥스파 가시와'를 통해 '영어회화나 '영어놀이', '송영서비스' 등 노인의 경험과 기술을 살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활지원사업'의 경우, 청소, 세탁, 조리, 통원, 외출지원, 장보기 대행 등의 업무로 활약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중에는 '건강장수산업 육성' 방침이 있다. 이는 단지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회 구현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간산업 활성화 및 최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이 주요내용으로 건강장수사회 실현에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시와시의 제2의 인생지원사업은 노인의 건강생활 및 사회참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설계에 참가가 될 것이다.

글 _ 박지선

▶ 관련자료

前田展弘, セカンドライフ支援事業の軌跡-柏市生きがい就労事業の成果と課題, ニッセイ基礎研所報, 58, 41-51, 2014. (마에다 노부히로, 세컨드 라이프 지원사업의 궤적-가시와시 사는 보람 취업사업의 성과와 과제-, 닛세이 기초연소보)
<http://www.nli-research.co.jp/report/shoho/2014/vol58/syoi407e.pdf>

센터링크의 서비스 개혁: ‘급여 지급’에서 ‘관계 형성’으로

호주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는 ‘시민중심 서비스와 통합적인 사회’라는 모토 아래, 2011년 말부터 센터링크를 중심으로 서비스 개혁에 착수했다. 핵심은 일선 사회보장업무 담당자들의 업무형태를 급여 지급(transaction)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connection)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 ‘관계 형성’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사무적인 자세를 벗어나 내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개인의 욕구를 존중함으로써 내담자와 직원들 간에 보다 개별화되고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들이 마음을 열게 되면 문제발생 초기에 자발적으로 센터링크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어 적절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내담자를 지원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지지적인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다. 즉,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사회 내에서 찾아내어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업무방식의 변화가 쉽지는 않았다. 많은 직원들, 특히 사례관리가 아니라 행정업무를 위해 채용되었던 직원들은 새로운 역할에 대해 낯설어하고 불안해했다. 개혁을 현실화하기 위해 호주 복지부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관계지향 서비스를 위한 상담기법과 정보

공유, 의뢰, 지지, 협상 등 내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담은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

복지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공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 와이롱 지역에서 실시된 미성년 부모 프로그램(DALE Young Parents Wyong Program)¹⁾도 그 중 하나이다. 센터링크 사무소 직원들은 미성년 부모들이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은 후,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지역의 기관들과 서비스들을 연계하였다. 그 결과, 미성년 부모들을 위한 유연하고 가족친화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많은 부모들이 교육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내담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 개혁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자신을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담자를 돕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사회복지종사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인간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소외된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링크의 개혁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글 _ 김지영

▶ 관련자료

- Hall G., Boddy, J. & Chenoweth L., (2013,6,11) From Transactions to Connections: Local Development in Australian Government Social Security Settings, 2013 PhD Conference 발표자료, The Center for Comparative Welfare Studies, Aalborg University(Denmark).
http://www.dps.aau.dk/fileadmin/user_upload/mb/CCWS/Barcelona_conference/LocalDevelopmentsAustralia_full.pdf
 Hall G., Boddy J., Chenoweth L., & Davie K. (2012) Mutual Benefits: Developing Relational Service Approached Within Centrelink, Australian Social Work, 65(1) pp. 87-103.

1) 이 내용은 2014 세계사회복지공동대회(7.9~12, 멜버른)의 현장방문 프로그램의 하나로 7월 11일에 호주 복지부 빅토리아주 지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Dan Hadson(Social Work Support Manager)과 Greg Hall(Social Work Manager)이 발표한 "Talking with teen parents, hearing young families"를 토대로 하였다. 와이롱 미성년 부모 프로그램은 미래세대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인 '미래인재 육성계획(the Building Australia's Future Workforce)'에 발맞추어 실시된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의 교육과 훈련에 초점을 맞춘 이 계획에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기 쉬운 미성년 부모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budget.gov.au/2011-12/content/glossy/skills/download/glossy_skills.pdf 참조).

지역에 따른 삶의 질 : OECD 지역별 웰빙 지수

OECD는 최근 지역별 웰빙(Regional well-being) 지수를 발표하였다¹⁾. 이 지수는 회원국을 362개 지역(각 회원국의 가장 큰 단위의 행정구역 구분을 따름)으로 나누어 소득, 고용, 건강, 교육, 환경, 안전, 시민참여, 서비스접근성 등 8개 주제에 대해 산출한 지표이다²⁾. OECD가 매년 발표해 온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가 국가 단위에서 삶의 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면, 지역별 웰빙 지수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 묻는다.

한국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강원, 충청, 전라, 경북,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이 비교되었다(표1). 수도권의 경우 서비스 접근성이나 교육, 소득은 7개 지역 중 1위를 차지한 반면, 고용은 취업률 66.6%와 실업률 3.8%를 기록하여 7.8점으로 제일 낮았고 환경은 0점이었다.³⁾

지역별 편차도 심했다. 교육 부문을 예로 들면, 수도권은 노동인구의 86%가 적어도 중등교육을 받아 OECD 362개 지역 중 상위 29%에 들 정도이다. 하지만 교육의

불평등 정도를 반영하면 한국의 교육은 전체 34개국 중 25위이다. 이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나 혜택이 현격하게 떨어짐을 보여준다.

수도권과 다른 국가의 주요 도시가 있는 지역을 비교해 볼 때(표2), 환경과 소득을 제외하면 4지역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투표율로 측정되는 시민참여는 7점으로 네 지역의 평균인 4.9점 보다 높았고, 서비스 접근성은 10점으로 인터넷 보급률 상위국가에 걸맞게 다른 지역보다 나은 점수를 받았다. 최하위 수준인 소득과 환경이 개선된다면 수도권의 주민들의 웰빙지수는 더 높아질 것이다.

한두 가지 항목으로 한 지역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모든 일상의 요소들에서 우리가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글 _ 이재연

[표 1] 한국 7개 지역의 OECD 지역별 웰빙 지수 (10점 만점)

지역	서비스 접근성	시민 참여	교육	고용	환경	소득	건강	안전	평균
수도권	10.0	7.0	8.8	7.8	0.0	3.5	8.8	7.5	6.7
경남	7.4	7.4	7.7	7.9	3.2	2.3	7.0	6.5	6.2
경북	7.2	7.7	6.9	8.5	1.2	2.9	7.4	8.1	6.2
전라	7.4	7.4	6.5	8.6	0.0	2.7	7.5	7.7	6.0
충청	8.7	6.8	7.1	8.3	0.0	2.9	7.9	7.1	6.1
강원	7.2	7.4	6.4	7.9	1.3	2.6	7.4	8.2	6.1
제주	6.5	6.6	7.4	9.7	3.7	3.2	9.3	5.9	6.5

[표2] 세계 주요 지역의 OECD 지역별 웰빙 지수 (10점 만점)

지역	서비스 접근성	시민 참여	교육	고용	환경	소득	건강	안전	평균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	10.0	7.0	8.8	7.8	0.0	3.5	8.8	7.5	6.7
일본 동경 (간토남부)	9.9	4.0	9.0	9.3	2.3	5.5	10.0	9.7	7.5
영국 런던 (대런던)	10.0	4.8	8.9	6.5	6.3	7.8	8.4	8.5	7.7
미국 뉴욕 (뉴욕주)	7.2	3.6	8.7	6.3	5.6	10.0	7.5	4.3	6.7
평균	9.3	4.9	8.9	7.5	3.6	6.7	8.7	7.5	

▶ 관련자료

OECD Regional Well-Being 홈페이지 www.oecdregionalwellbeing.org

- 2014년 10월 최종 분석이 담긴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며 향후 필요한 항목이 지속적으로 추가될 계획이다.
- 각 항목은 하나 또는 두 가지의 통계가 활용되어 10점 만점으로 환산된다. 소득은 1인당 가처분 소득, 고용은 취업률(15-64세 사이의 노동인구 중 고용된 사람의 비율)과 실업률(노동가능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건강은 출생아 기대수명과 연령표준화 사망률, 교육은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노동인력의 비율, 환경은 미세먼지 PM2.5에 노출된 인구, 안전은 살인율, 시민참여는 투표율, 서비스 접근성은 광대역통신망 설치/구 비율로 측정된다. 지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는 Regional Well-Being User Guide 참조 <http://www.oecdregionalwellbeing.org/assets/downloads/Regional-Well-Being-User-Guide.pdf>
- 환경은 2012년 기준으로 27.4 Level을 기록하여 1위인 제주 지역(15.1 Level)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OECD 전체적으로 볼 때 수도권 환경은 362개 지역 중 하위 4%에 머무르고 있어 수도권의 환경 상태가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이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멕시코는 수도 멕시코시틀을 포함한 지역(federal district)의 환경 점수는 3.7점(15.1 Level)로 제주 지역과 같은 수준이었다. 환경과 관련하여 물, 폐기물, 편의시설 등 보다 종합적인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OECD도 동의하고 있다.

복지이슈Today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내외 복지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창간된 월간지입니다.

- 본지는 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복지자료 → 복지이슈Today)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발간에 관련된 문의사항과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간팀(연구개발실 정책연구팀, 02-2011-0570, jkim@welfare.seoul.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Tel. 02)2011-0570 Fax. 02)2011-0520